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경기회복 시현”

- 기획예산처, 정부출범 1주년 핵심성과 보고 -

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경기회복 뒷받침

- 재정의 적기대응('25년 2차 추경)으로 정부출범 직후 성장률 반등('25.상 0.3→'25.하 1.7%). '26년 중동전쟁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하게 처리(29일, 과거평균 70일)

②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

- '26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27.3조원)의 지출구조조정 단행,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25년 역대 최대 건수(992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③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추진

-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2배 이상 확대('25 517→'26 1,09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 3배('25 3.5→'26 10.6조원) 확대 등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26.5.20일(수) 14:00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하였다. 금일 보고한 핵심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경기회복 뒷받침]

기획예산처는 지난 1년간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회복을 견인하였다. 정부출범 직후인 '25.7월 편성된 새정부 첫 번째 추경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15~55만원) 등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1.6조원을 집중 투자하였다. 그 결과 '25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반등('25.상 0.3% → '25.하 1.7%)에 기여하였다. 특히, 경제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전년동기비)가 '25년 상반기 0.3%p에서 '25년 하반기 0.9%p로 3배 수준 상승하는 등 추경 대표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민간소비를 크게 진작 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의 전쟁추경('26.4월)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과거20년 평균 70일)만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26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총지출 규모를 8.1%로 대폭 확대('24 2.8 → '25 2.5 → '26 8.1%)하였다. 특히 지방거점성장(+10.3조원, +54.2%), AI 대전환(+6.6조원, +200.0%), 에너지 전환(+1.9조원, +31.7%) 등에 중점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였다.

[②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

기획예산처는 '26년 역대 최대규모인 $\Delta 27.3$ 조원('22 $\Delta 12.8 \rightarrow$ '24 $\Delta 22.7 \rightarrow$ '26 $\Delta 27.3$ 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일소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전체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1.7만개의 25% 수준인 4,400여개의 사업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의 6배 이상인 1,300여개의 사업을 폐지하였다.

또한,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였다. '26년 첫 번째 평가결과('26.1~5월)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 사업의 비율은 36.3%(901개 사업)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평가결과는 엄격한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27년도 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감액사업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운용 과정상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25년 합동 현장점검, 부처 자체점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한 의심사업 추출(10,780건)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 건수의 부정수급('24 630건·493억원 \rightarrow '25 992건·668억원)을 적발하였다. 또한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26.3월)하여 현장점검을 '25년 대비 20배 이상 확대(606 \rightarrow 13,200건+ α), 대국민 신고센터 개설, 제재·신고포상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③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추진]

기획예산처는 나라살림 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 사업 외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포함시키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2배 이상 확대(300→600명)하는 등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개편('25.12월)하였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 최초공개('25.8월), 공개되는 통계항목 수 확대('25.12월, 206→242종) 등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국민참여예산의 국민제안이 2배 이상 늘어나고('25 517 → '26 1,091건),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 이용자가수가 30% 이상 증가('24 39 → '25 51만명)하였다. 또한 재정당국이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최초로 개최('26.4월, '26.5월)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였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하여 수혜자 지원금 인상, 사업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율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 하였다. 그 결과 '26년 아동수당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해 0.7조원이 추가 지급 되었다.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 규모도 3배 이상 확대('25 3.5 → '26 10.6조원)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였고,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를 △5%p 축소하고, 지역균형 가중치는 +5%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신설·강화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처는 소관 국정과제(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기획예산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류승수 (044-214-1410)
		담당자	서기관	이홍섭 (leehs86@korea.kr)
			사무관	김나현 (nahyun5959@korea.kr)
			사무관	박제용 (jypark0601@korea.kr)